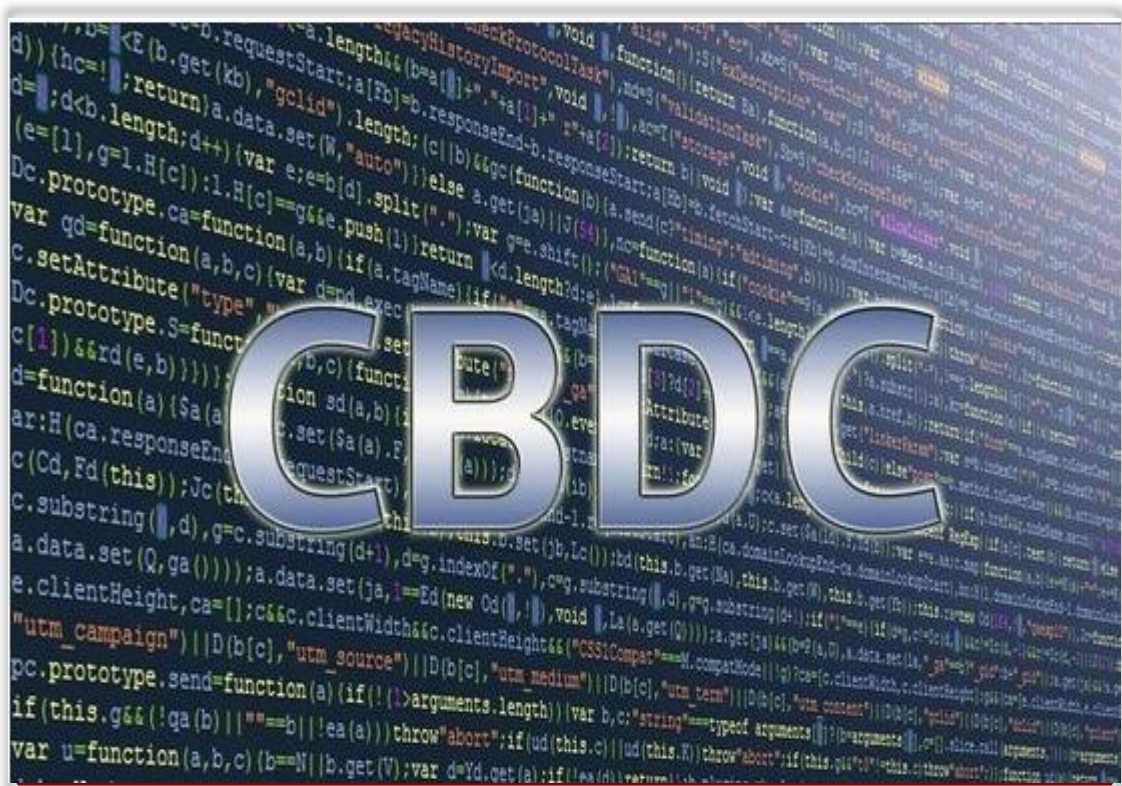


한국 CBDC 법률적 근거와 쟁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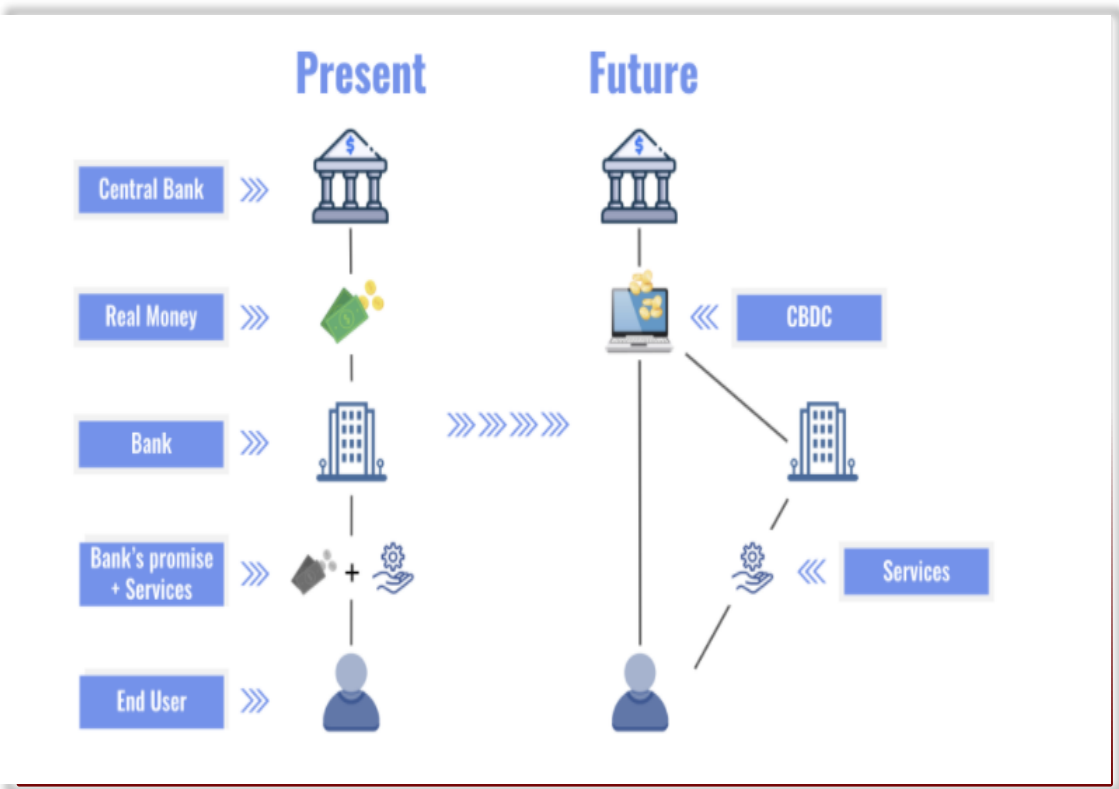
한국 CBDC의 법률적 지위

- CBDC는 통화표시 수단 불과
- 다만 형태에 대한 한국은행법상 근거 신설 필요
- CBDC 준비금 조항 신설 필요
- 계좌 관리 위임 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
-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부과 근거 필요



관련 법규상 쟁점

-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
-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일원장 간접운영 방식을 두는 경우 일부 수정이 필요함
- 건전성 규제 조항 관련하여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
- 개인정보보호 법규상 보호규정 필요
- 분산원장 도입하는 경우 전자지갑/거래검증기관 관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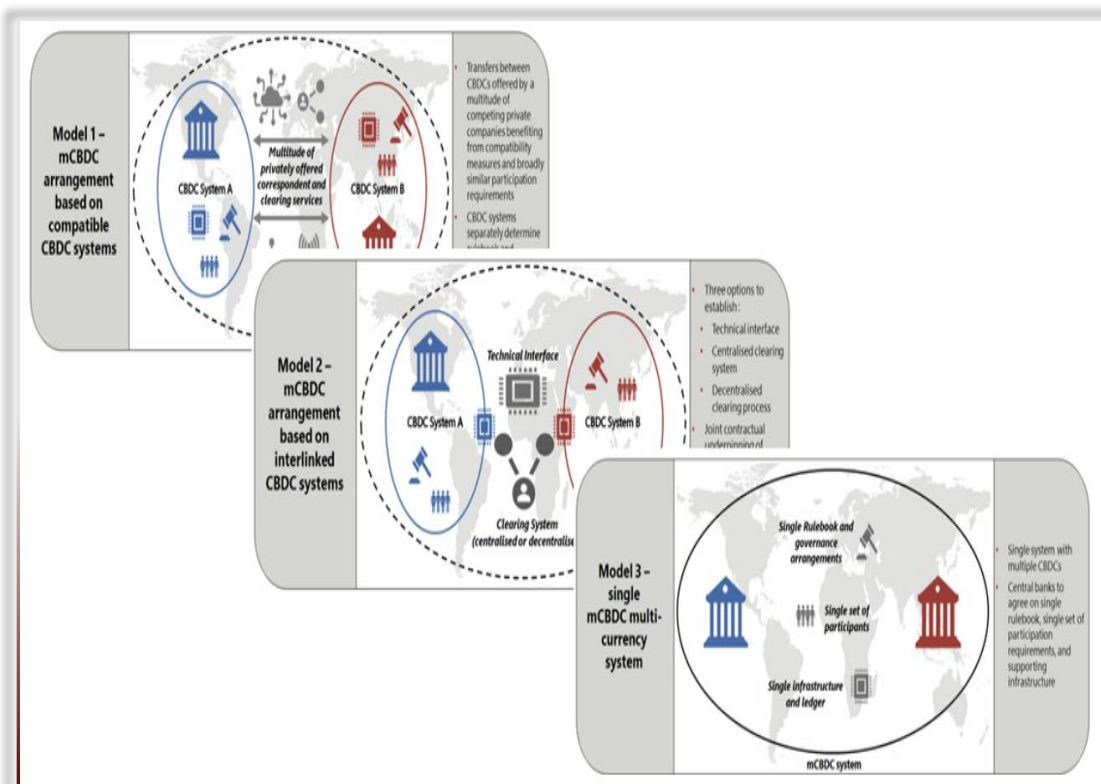
CBDC와 특정금융정보법

- 통상의 가상자산과 달리 취급할 필요
-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할 필요 인정됨



CBDC의 국제사법상 문제

- CBDC 자체의 유효성 관련 분쟁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인정되는 방향이 타당
- CBDC의 이전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해석 효력 유무 문제 분쟁의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서 정함



CBDC와 형사법

- 재산상 이익 및 전자기록에 해당하는 경우
CBDC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
- 따라서 위 규정상 의율 가능함



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률적 제도 구비

- 현행 법적 강제제도들이 CBDC에도 적용되도록 CBDC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
- 민사집행법에 CBDC를 현금과 동일하게 보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, 구체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이 확보되어야 할 것